

산업부가 배터리 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
<보도내용>

- 2026.1.15.(목). 동아일보 「점유율 뚝-계약 줄취소…배터리도 구조조정 시사」 기사에서,
 - 동아일보는 “정부가 석유화학에 이어 배터리 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 >

- 산업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배터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, 정부와 업계가 함께 활로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,
 -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지만, 업계에서도 현 상황이 지금의 석유화학업계와 같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.
- 또한, 석유화학처럼 자발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하거나, 배터리 기업 수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.
-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,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.

담당 부서	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	책임자	과 장	박재정 (044-203-4260)
		담당자	사무관	박문일 (044-203-4263)